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20. 2. 26.(수) 총 36매(본문15)	
담당 부서	기획담당관	담당자	•과장 박지홍, 서기관 조민우·우종하·정재원 사무관 위은환	
			☎ (044) 201-3204, 3205	
보도일시		2020년 2월 27일(목) 업무보고 행사 종료 후 (11:40 예정, 별도 통지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『확실한 변화, 대한민국 2020!』

삶의 터전이 바뀝니다! -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

국토교통부, 2020년 “활력 넘치는 경제, 편안한 일상”을 위한 업무보고 실시

◆ 경제활력 제고 「3대 목표 8대 전략」, 「2대 민생현안」 추진 ◆

경제활력 목표1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

①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

- △ 인프라+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로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화
- △ 새만금 사업 본격 추진, 행복도시·제주 자족기능 강화

② 노후지역 재생 혁신

- △ 혁신지구(패스트트랙) 도입 등 新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(15곳)
- △ 노후산단을 창업·문화·여가의 중심지로 大개조(5곳)
- △ 공공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개발(5곳)

③ 잠재 거점을 산업·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

- △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, 규제완화 집중하는 기업혁신특구 도입
- △ 인바운드(외국인의 국내여행) 시범공항(항공+관광)으로 지역관광 활성화
- △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(세종·부산) 및 스마트챌린지(대전·인천·부천 등), 수소도시(안산, 울산, 전주·완주)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

경제활력 목표2 지역SOC 투자 활성화

④ 지역SOC 투자 확대

- △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, 노후·생활SOC 투자 확대

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(예타면제) 본격 추진 : 총사업비 21.7조원

경제활력 목표3

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➡ 좋은 일자리 2만 개

⑥ 국토교통 산업 혁신

△ 건설 임금직불제 확산, 광역버스 준공영제·택시월급제 등 근로여건 개선

⑦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

△ 플랜트·인프라·스마트시티 펀드(PIS펀드, 1.5조원)로 해외 PPP사업 수주 지원

△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,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G2G 협력 강화

△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(5개국) 등 해외 스마트시티 수출성과 가시화

⑧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

△ 드론택시 시험비행,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시행

△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, 스케일업 지원방안 마련

민생과제 1

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

△ '20년 21만호 공급 ➡ OECD 평균인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% 달성

△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,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흔들림 없는 부동산 시장 안정

민생과제 2

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

△ GTX 등 광역철도망 확충, 대심도 건설사업 제도적 기반 확충

△ 서울역·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허브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월 27일(목) 청와대 영빈관에서 『확실한 변화, 대한민국 2020!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! -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』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.

○ 국토부는 '활력 넘치는 경제, 편안한 일상'을 위하여 『3대 목표 8대 전략』, 『2대 민생현안』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다음은 경제 활력과 민생 현안을 위한 2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2020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이다.

①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

- **혁신도시**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*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경제거점으로, **새만금**은 투자진흥지구 도입,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('20.12)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. **행복도시**는 바이오·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('20.9)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.

* (클러스터 활성화) 공공지원건축물 등 저렴한 기업입주공간 마련, 입주업종 제한 완화, 장기저리임대 등 클러스터 분양·착공 촉진

** (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) 입주기업 계약우대 및 지역물품 구매 확대 등 이전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강화, 특구지정 등 규제완화

- **산단 내 휴·폐업부지**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, 문화·레저,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·복합 개발하여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, **도심내 방치된 공업지역**은 공기업이 주도하여 복합개발한다(5곳, '20.9). 공공이 주도하는 **도시재생혁신지구**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
- 지방의 대학,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여 산업, 주거,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'(가칭)**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***'를 새로이 추진한다. 캠퍼스 혁신파크, 창업·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, 세제·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하여 **제2, 제3의 판교**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.

* ①공간플랫폼 조성(대학·역세권 등 + 기업·문화·주거 등 융복합), ②지구 중복지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 및 세제·금융·재정 지원, ③입주기업에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·패키지화 ☞ 기업·청년이 어우러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

- **인바운드**(외국인의 국내여행) **유치 시범공항**으로 청주·양양·무안 공항을 지정하여, 항공·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,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. (시범사업 1~2곳, '20.11)

- **스마트시티**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('20.7),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*(10→18곳)한다. 아울러, 올해는 민·관·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. 특히,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.

* 기존 공모사업(스마트시티 챌린지·테마형 특화단지)과 새로운 사업유형을 통합, 사업규모에 따라 도시(대)-마을(중)-생활권(소) 단위로 사업체계 개편

-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**예타면제사업**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(200억원), 국도20호선 신안-생비량 사업(113억원)부터 연내 착공한다.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.

-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,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('24 완료)하고, 김해신공항·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.

- 건축 디자인으로 **도시의 품격을 제고**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('20.11 업무절차 기준 마련) 시키고,

-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(최대 70%), 국·공유지 실효 유예('20.7~'30.7),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고,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, 드론·항공사진 활용 관리('20.9) 등을 통하여 그린벨트 등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보존·관리를 강화한다.

②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

- 자율차·드론·스마트시티·스마트건설·수소 경제·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·제로에너지 건축 등 **혁신성장 사업 분야**에서 **가시적인 성과**를 본격 창출한다.
 - **자율차**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('20.8), 시범운행지구 지정(3곳, '20.11) 등을 통하여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, **드론**은 특화도시('20.11),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('20.11)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.
 - 국토위성 발사(공간정보), 스마트 텀키사업 확산(스마트건설), 수소 도시 조성 착수(안산, 울산, 전주·완주),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(ZEB) 적용 의무화,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('20.11)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 분야 **벤처·중소기업이 강소기업**으로 **성장**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'One-call 지원체계'를 구축하고,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 - **민관 협업**(One-call 지원체계) : 먼저 업계와 함께 분야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, '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'를 설치하여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.
 - **범부처 통합지원** : 중기부·산업부·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킷(tool-kit)*를 작성·보급하여 창업·금융·R&D 등 사업단계별 통합지원을 제공하고, 신기술 전용 시험장(테스트베드) 확충, 시범사업 등 맞춤형 종합지원방안도 마련('20.5)한다.

* 창업 지원, 금융 지원, R&D 지원, 인력양성,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사업

- **맞춤형 규제혁신** : 기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소통을 통한 ‘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’ 선정, ‘규제 솔루션팀’ 설치(‘20.2) 등 입지·건축·미래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하여 기업 친화형 부처로 거듭날 계획이다.

□ 기존 산업의 **근로여건을 개선**하고, **산업 체질**을 개선하기 위한 **혁신**도 이어 나간다.

-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**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**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(‘20.10).
-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 시키고, 개인택시 면허 **양수 자격요건**을 완화하여(‘20.4)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.
- **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**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, **화물차 안전운임제**를 본격 시행하여 운수·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.
- 김포(경정비)·사천(중정비)·인천(화물기·엔진) 등에 운항 중인 항공기 특성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**항공기 정비산업**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한다.
- 국가 규모 R&D(철도, ‘20.4~’25.12)를 통해 **철도 부품산업**을 육성 하는 한편, 튜닝 승인절차 면제(‘20.11), 튜닝카 성능·안전시험센터 (‘20.9, 착수) 등을 통해 **자동차 애프터마켓**도 활성화한다. ,
- 건설 분야 ‘100대 혁신뿌리기업’ 선정(‘20.8),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(‘20.8) 등을 통해 **스마트 건설, 프롭테크 기업**도 적극 지원한다.
- KIND, PIS펀드, ODA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, 글로벌 인프라 협력을 통해 **신남방·신북방정책**도 적극 수행한다.

③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

-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다.
- 올해 **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**하여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% 달성을 추진한다.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'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(10%)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-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,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.
- 영구·국민·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·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,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**공공임대주택**을 하나의 **유형으로 통합·공급**(‘20.11, 2곳 1천호)한다.
- 이를 통해, 입주자격·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되고,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으며,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**쪽방촌**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(‘20.11 지구지정),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(‘20.9 사업지 선정) 해 나갈 계획이다.
- * 새뜰마을 사업,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 등 국토부가 보유한 정책수단을 연계
- 저소득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도래(서울 內 ‘22년까지 19개단지 3.1만호)하는 **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**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(‘20.11)한다.

-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주거와 **지역산업, 일자리,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**을 개발하여 확산한다.

-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**창작행복주택**, 서울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.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**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**,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**커뮤니티케어 지원주택**도 확대할 계획이다.

□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.

- **수도권 주택 30만호** 지구지정·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*, 서울 **도심 4만호**도 **조기 추진**하여 우선 1천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.

*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1·2차 지구 15.4만호(16곳)는 지구계획 수립, 3차지구 10만호는 '20년 지구지정 추진 → '21년말 주택공급 시작(첫마을 시범사업)

-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**GTX 역세권개발**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.

□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**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**하고,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간다.

-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하여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,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('20.3)한다.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('20.6) 할 계획이다.

-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**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**('20.11)한다.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·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('20.6)한다.

- 임차인 보호를 위해 **임대차 신고제**를 차질없이 도입하고,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('20.4) 한다.
- 단독·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,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('20.6) 한다.
- 일부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('20.9)하고,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여('20.9) 공공성도 강화한다.
-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**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**을 마련('20.10)하여,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.
- 특히, '20년 공시가격 산정 시,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하여 가격대별 공시가격-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.
- **1인 가구** 증가, **저출산** 등 **주거트렌드 변화**에도 적극 **대응**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.
- **1~2인용 소형 공공임대** 공급을 확대하고, 직장초년생,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('20.6)한다. 민간 공유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('20.11)한다.
- **저출산 극복**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**신혼희망타운**(1만호 입주자 모집, 3만호 신규 승인), **국민·행복주택** **신혼특화단지**(2천호) 등 **공적 임대 5.2만호**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한편,

-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(2천호, '20.3)을 신규 공급하고, 주택 자금 대출금리·한도도 우대한다.
-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(1천호), 공공 리모델링주택(1천호), 문턱 없는 임대주택(1만호)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.

4 교통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

- 드론·자율주행·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, 글로벌 기술 기준을 선도한다.
- **드론** : 도심형 항공모빌리티(UAM : Urban Air Mobility)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**드론택시 시험비행**(‘20.11), 비가시권·다수비행을 지원할 **K드론시스템 실증**(‘20.5)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,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비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**비행자유화구역 지정**(‘20.11) 등 UAM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간다.
- **자율주행차** : 세종시에서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(45인승, ‘20.10)하고,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(‘20.7)함으로써 세계 최초 운전자 조향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기반을 조성한다.
-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**관광형 MaaS***를 확산시키고, 버스·택시·렌터카·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도심형·거점형 등 다양한 **MaaS 도입방안**을 마련(‘20.7)할 계획이다.
- * Mobility as a Service : 한 플랫폼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·예약·결제하는 서비스
- **플랫폼 택시 확산**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(‘20.6)을 설립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한다.

□ **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·도로망을 확충**하고, **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**한다.

○ **GTX A노선** 공사('23 개통), **B노선** 기본계획 착수('20.1), **C노선** 사업 착수('20.11, RFP 고시), **신안산선** 공사('24 개통)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, **서부권 GTX 도입** 등도 검토한다.

- 수도권 1·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, 서해안·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대책도 마련한다('20.11).

○ **400km/h 초고속열차** 도입에 착수('20.10 기본계획 반영 추진)하고, **중앙선**(원주-제천) **EMU-250**(250km/h)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제고한다.

○ **서울역·청량리역 환승센터**('20.2~3 구상 착수)를 통해 고속철도·GTX·도시철도·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, 서울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.

- 공공주택·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여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하고, 공공기관 참여도 확대한다.('20.11 환승센터기본계획)

- **퍼스트·라스트 마일***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**공유모빌리티** 환승 시설 설치 및 **PM(Personal Mobility) 활성화**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('20.11 관련 법령 제·개정)이다.

* (퍼스트 마일) 현위치에서 대중교통까지 거리, (라스트마일)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거리

□ 기존 **대중교통** 수단 이용편의를 **개선**하고, **서비스 품질 수준**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.

- M버스 노선 확충(35→44개), 예약제 확대(8→20개)를 신속 추진하고,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('20.9),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확대(15%)한다.
- 교차로에서 멈춤 없이 통과하는 S-BRT('20.9 기본설계 착수), 간선도로 내 '고속' 버스전용차로,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('20.8 방안마련) 등 신개념 버스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.
- 또한,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('20.6)하여 과도한 교통량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등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.
- 신규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 수립하고, 기존 신도시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, 보완대책을 시행('20.11)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.
-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(162곳),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(13곳)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,
- 고속철도 승차권 무료 예약 변경 확대(SRT, '20.11), 모든 열차 내 Wi-Fi 설치, 공항 입국장 면세점 전국 공항 확대('20.6) 등 국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.
- 서비스 사각지역 등에 **준공영제 시범사업**을 추진('20.7)하여 광역버스 혁신기반을 마련하고, 휠체어 탑승버스 확대(4개→8개 노선),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시설 개선(승강기 확충, 승강장 높이 조정 등)으로 대중교통 공공성도 강화한다.
- 또한 **광역알뜰교통카드**를 본격 시행('20.1, 13개 시·도)하고, 저소득 청년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('20.3)하여 서민의 교통비를 절감한다.

5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
-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**안전사고**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**예방조치**를 **강화**하고,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는 등 행안부, 경찰청, 지자체와 함께 **범부처 역량을 집중**한다.
- **교통안전 사망자** 수는 '18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천 명 대로 감소한 이후, '19년에도 전년 대비 11%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
 - 감소세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'안전속도 5030'을 특·광역시에 전면 시행하고, 비보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,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선 정지(Stop 사인) 등 **보행자 우선 교통체계**를 확립한다.
 - 특히,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**어린이**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 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, 그간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.
- 또한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**이륜차 사고**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(배민)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,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한다.
- 도로 위 **살얼음** 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제설 체계 구축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('20.1)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개선(전국 180곳)하여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.
 - 또한, AI 스마트 CCTV를 확충(500곳)하고, 터널원격제어·산사태 예측시스템 구축(10곳),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('20.11) 등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한다.

- **건설현장 사고 예방**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 '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(428명) 대비 **14% 이상 감축**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.
 - 우선 권한있는 발주자·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하여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.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, 사고빈발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퇴출한다('20.6).
 - 또한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·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, 특히,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 -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, 원격조정 크레인 안전 장치를 의무화하며, 사전 안전검사를 확대하여 부적격장비를 퇴출 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('20.10).
- 도로·철도·교량 등 **기반시설, 지하공간** 및 송유관 등 매립시설, **노후 건축물** 등 국민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 - 주요 기반시설의 **최소유지관리·성능개선 기준**을 마련('20.3)하여 유지관리 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(15종 시설 약 5.5조원, 40% 증가)하고,
 - 현장점검을 확대(200 → 240곳)하여 부실 점검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하는 한편, 인프라 총조사·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('20~'23)한다.
 - 한편 27개 市의 지하공간지도를 구축('20.12)하고, 재해재난 발생시 공간정보를 1일 이내 제공하는 'G119' 서비스를 시범 도입('20.9) 하며,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도 현장중심으로 개선('20.9)한다.

- 화재에 취약한 **다중이용건축물**에 외장재 교체 등 **화재안전 성능 보강**을 위한 **비용 일부**를 지원하고, 기술인력·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점검하도록 **정기점검 요건도 강화**(20.5)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한다.
- 또한 지자체·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는 **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서비스**를 **확대**(27→30곳)하여 여성 안심귀가, 112 피해자 보호,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**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안전망**을 구축한다.
- 7년(항공), 6년(철도) 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었던 **항공·철도** 분야도 **안전지표 확대**, 빅데이터 구축 추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**안전관리체계의 신뢰성**을 한층 더 제고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“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, 투자를 활성화하겠다”고 언급하였다.
- 박 차관은 이어 “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, 지역에서 환영 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,
- 광역급행철도(GTX), 복합환승센터 등 **교통인프라**를 혁신하여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,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우종하 서기관(☎044-201-320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국토교통부 2020 업무보고 [활력 넘치는 경제, 안전한 일상]



확실한 변화 01 >>>

활력 넘치는 경제,
확실히 만들겠습니다.



목표1 지역경제거점 조성

전략 1 —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



전략 2 — 쇠퇴지역을 경제혁신 거점으로 재생



전략 3 — 산업·기술 융복합 거점을 집중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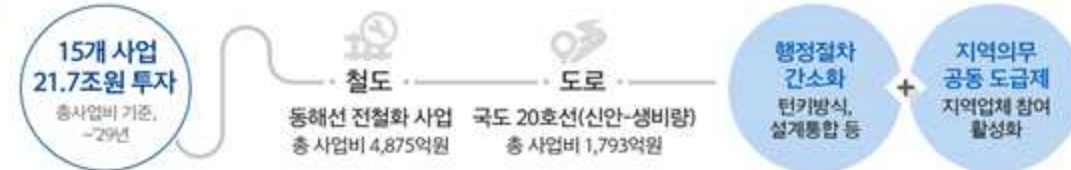


목표2 지역SOC 투자 활성화

전략 4 — 대규모 핵심 SOC 중심 투자 확대



전략 5 —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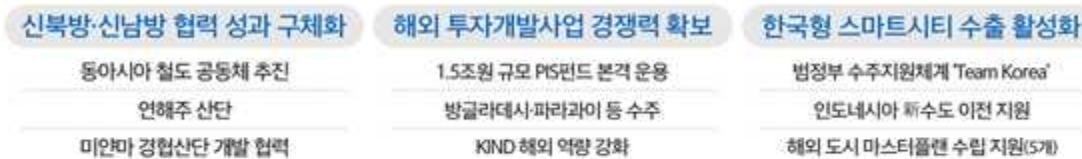


목표3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[좋은 일자리 2만개]

전략 6 —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



전략 7 — 글로벌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



전략 8 — 혁신성장 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



확실한 변화 02 >>>

편안한 일상의 약속, 반드시 지키겠습니다.



민생현안1 서민 주거안정 강화

▶ 장기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 개막



'20년 공적주택 21만호 공급

'25년 OECD 10위권 진입
공공임대재고율 10% 달성 추진

취약계층 주거 종합 지원
전수조사 실시·발굴

▶ 지역에서 환영받는 임대주택 확산

문화·예술연계 행복주택
(웹툰·극단)



중소기업근로자
지원주택



커뮤니티케어
주택



▶ 투기억제·공급 확대



주택보유의 사회적 책임강화

- 낮은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
-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



불법행위·이상거래 상시조사

- 불법행위 대응반 발족
- 국토부 직권수사



주택 공급 확대

- 수도권 30만호 공급 조기화
- 서울 내 주택공급 지속 추진

민생현안2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출퇴근 시간 단축

▶ 전국 주요 거점 30분대 급행철도망 구축



대심도 GTX-A·B·C,
신안산선 등 신속 추진

준고속열차
(EMU, 260km/h) 도입

400km/h급 초고속열차
도입 착수

▶ 철도 연계 교통체계 강화



대중교통 연계 체계

버스, 택시, 개인형
공유 모빌리티 연계



서울역, 청량리역
복합환승센터 구축

서울강북지역의
경제 거점화

참고 2

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	주요과제	국민체감 성과
1	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	▶ (노후산단 재생) 상상허브 2곳 내외, 산단연계 재생 3곳 등 착수 ▶ (도시재생 뉴딜) 거점형 뉴딜사업 4곳 착공, 15곳이상 신규 선정, 기선정사업('17~'19년 284곳)에서 300개 내외 생활SOC 공급 ▶ (캠퍼스 혁신파크) 선도사업지 3곳 착공, 신규사업 공모 ▶ (공항 특화 주변개발) 시범사업 1~2곳 착수 ▶ (혁신도시) 기이전기관(21개)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▶ (새만금) 태양광 선도사업, 수변도시 조성사업 착공 ▶ (에타면제 국가균형발전인프라 사업) '20년 재정 1,883억원 투입
2	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	▶ (스마트시티) 세종 착공, 기존도시 스마트사업 확대(10 → 18곳, 통합플랫폼 30곳), 해외도시(5곳)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▶ (스마트건설) 스마트터키 사업 지속 확산(6건) ▶ (수소 경제) 수소시범도시(3곳) 종합계획 수립, 수소충전소 17기 추가설치(휴게소 15, 혁신도시 1, 행복도시 1) ▶ (공간 정보) 국토위성 발사, 디지털 트윈 서비스 시범운영(전주) ▶ (일자리) 창업공간 1,171개 조성, 일자리창출 21,528명 ▶ (건설) 임금직불제 민간공사 확산, 하도급 간접비 별도 지급 ▶ (택시) 전액관리제 정착,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 ▶ (물류)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, 택배 근로환경 개선
3	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	▶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- 청년: 공적임대 4.3만호,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 - 신혼부부: 공적임대 5.2만호, 신혼희망타운 1만호 - 고령자·저소득층: 공적임대 8.6만호 등 ▶ (쪽방 정비사업) 서울 영등포 지구지정, 지방 1곳 선정 ▶ (노후아파트 정비) 서울 영등포 영진아파트 정비 착수 ▶ (청년 세어하우스) 노량진 노후 고시원 매입 후 리모델링 ▶ (층간 소음)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·확인제도 도입 ▶ (부동산 공시가격) 단독주택, 토지,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
4	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	▶ (모빌리티 혁신) 드론택시 시험비행, 자율차 레벨3 기반 완비 ▶ (플랫폼 택시) 플랫폼 택시 대중적 확산 ▶ (교통인프라) 철도 노선 11개 개통, 간선 도로망 267km 개통 ▶ (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개선) '19년 85km, '20년 76km ▶ (대중 교통) M버스 노선 확충(35 → 44개), 예약제 확대(8 → 20개), 인터넷 포털을 통한 열차승차권 예·발매 ▶ (교통 편의) 공영주차장 확충(280곳), 공항주차장 예약시스템 도입 ▶ (장애인용 대중교통) 버스(4 → 8개), 콜택시(3,420 → 3,680대) ▶ (광역알뜰교통카드) '19년 8개사·도 2만명, '20년 13개사·도 7만명 ▶ (민자도로 통행료 인하) 대구-부산(재정도로 대비 2.33배→1.1배), 서울-춘천(재정도로 대비 1.5배→1.1배)
5	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	▶ (교통사고 사망자) '19년 3,351명, '20년 2,800명대 ▶ (항공 100만 비행횟수당 사고건수) '19년 3.8건, '20년 3.6건 ▶ (철도 운행거리 1억km당 사고건수) '19년 9.0건, '20년 8.5건 ▶ (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자) '19년 428명, '20년 360명대 ▶ (기반시설 유지관리 투자) '19년 3.9조원, '20년 5.5조원 ▶ (건축물 안전관리) 다중이용건축물의 화재 성능보강 의무화

☐ (맞춤형 규제혁신) 규제혁신 과제 선정기준과 향후계획은?

- ☐ 그간 국민의 규제개선 요구가 많거나 혁신기술이 활용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할 예정('20.3)
 - ☐ 이후 과제별로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, 맞춤형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
 - 특히 관련단체 간담회,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허브* 설치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겠음
- * 국토교통진흥원 내 설치하여 창업 등 기업애로사항 등에 대해 총괄지원

☐ (중소·벤처 종합지원) 국토교통 분야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

- ☐ 국토교통산업은 종사자가 전체 약 5백만명(19%)에 이르고, 중소기업이 75.9만개(전체 중소기업 중 20%)에 달하는 우리 일자리와 경제의 근간
 -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이 높고 기존산업을 혁신하는 중소·벤처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
 - ☐ 특화된 경쟁력과 아이템을 가진 중소·벤처기업이 있으나, 이와 같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·투자,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
 - 이에 따라, 우리부는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토·교통 분야 중소·벤처기업*을 육성하는 맞춤형 종합지원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
- * 스마트시티, 스마트건설, 드론, 자율주행차, 첨단물류, 녹색건축, 공간정보 관련 등

☐ (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) 기존에 지방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하던 도시재생혁신지구, 캠퍼스혁신파크 등 사업과 다른 점은?

☐ 기업혁신특구는 입지가 좋은 도심에 기업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산업 공간을 조성하고, 규제 혁신, 세제·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새로운 정책과제

○ 지방의 도심 특성*에 따라 도시재생, 역세권개발, 캠퍼스 혁신파크 (도시첨단산단) 등 각종 공간정책을 융복합할 예정

* 유형별 사업가능 지역(예시) : ①역세권, ②대학, ③유희 국공유지, ④혁신도시

○ 또한, 계획 단계부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창업, 스케일업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

☐ 올해 상반기에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

☐ (스마트시티)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, 향후 지자체 보급 및 서비스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?

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의 교통·112·119·재난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스마트 도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,

○ '15년부터 '19년까지 49개 지자체에 보급하였고 금년 30개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며, 2020년까지 전 국토망 구성을 완료할 계획

○ 통합플랫폼을 통해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최적의 출동 경로를 알려줌으로써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화재 현장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

* (대전시 구축효과) 112 검거율 2.7% 증가, 119 출동시간 약 1분 28초 단축

☐ 올해는 여성 안심귀가 지원, 배출가스 위반차량 단속 등 복지·환경 분야로 확대하여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
□ (스마트시티)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민간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?

- 그간 MP와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5-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공간계획과 혁신 기술·서비스를 구체화하여 왔음
 - 올해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,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여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해 나갈 예정
 - 금년 상반기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여,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민·관 공동 SPC를 구성해 나갈 계획
 - 이후, 민·관 공동 SPC가 주도하여 국가시범도시에 첨단 서비스·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끊임없이 실험·보완하여 지속가능한 혁신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할 계획

《 참고.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》

- (현황)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세계적 수준의 미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착수('18.1)
 - 세종 5-1생활권,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('18.1)하고 시범도시별 마스터 플래너(정재승 MP, 황종성 MP)를 선임('18.4)
 - MP와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위, 관계부처 등이 함께 국가시범도시의 비전, 추진전략 및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('18.7)하고, 이를 구체화하여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 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('19.2)
 - 부산 시범도시 착공('19.11), 세종 시범도시 실시계획 수립('19.12) 등 시범도시 용지조성과 함께, 기업·시민 의견수렴('19.9~12, 총 18회)을 거쳐 시범도시 내 구현할 혁신 기술·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수립('19.12)

☐ (혁신도시)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만큼, 이제는 보다 많은 민간 기업들이 혁신도시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?

- ☐ 혁신도시를 지역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클러스터 활성화, 입주 기업 인센티브 확대,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할 계획
 - (클러스터 활성화) 공공지원건축물 등 저렴한 기업입주공간 마련, 입주업종 제한 완화, 장기저리임대 등 클러스터 분양·착공 촉진
 - (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) 입주기업 계약우대 및 지역물품 구매 확대 등 이전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강화, 특구지정 등 규제완화
 - (산학연 협력체계 구축) 관계 부처(산업부·과기부 등) 협업을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 및 사업화 촉진, 혁신도시별 발전재단 설립

☐ (주거복지)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?

- ☐ 청년 독신가구·고령독거세대 등 유형별 맞춤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, 주거 서비스를 강화
 - 청년 독신가구를 위해 공유주택·기숙사형 등 맞춤형주택 공급('20년 4.3만호) 및 부모와 떨어져 거주 시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,
 - 고령 독거세대를 위해서는 문턱제거·안심센서 등 무장애로 설계사회 복지관 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맞춤형주택('20년 1만호) 확대
- ☐ 이와 함께, 기존 다인가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1인 가구 중심의 인구구조·주거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마련 중
 - 공유주택 활성화*를 포함하여 상반기 중 관계부처가 함께 1인가구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·발표 예정

* 공유주택 조성기준 마련(가이드라인), 스타트업 지원펀드 조성, 규제개선 등

☐ (주거복지) 주거복지로드맵 전환점을 맞았는데, 추진상황은?

☐ 지난 2년간 공공주택 42.9만호, 전월세·구입자금 54.3만가구, 주거급여 104만 가구 등 총 2백만 가구 이상의 무주택 서민을 지원

* (2년간 실적) ①공공주택 42.9만호^{105.2만호} 공급 ②금융 전월세·구입자금 54.3만 가구 45.6조원 ③주거급여 104만 가구('19년말)에 月평균 13.5만원

○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대수준으로 공급 중이며,

- 취업과 결혼, 출산과 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이어지는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보완

☐ 로드맵 이행 중반기에 접어든 만큼, 이제는 주거안전망의 획기적 개선 등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필요한 시점

○ 그간성과 및 보완점 등을 종합하여 중장기 공급계획, 인구변화 대응, 최저소득계층 주거권 보장 등을 담은 보완대책을 3월 중 마련

☐ (국가균형발전 인프라)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는 시공능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지?

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업체도 일정 부분*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기업의 수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

* (지역업체 의무도급 비율) 300억원 이상 또는 턴키공사 20% 이상 / 300억원 미만 일반 공사 40% 이상

○ 지역업체 의무 도급제로 대기업-중소기업간 상호협력 확대, 기술이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☐ (타워크레인 안전)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?

☐ 「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(19.7)」에 따라 소형 장비의 규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 도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

☐ 특히, 올해는 안전장치* 의무화, 현장점검 및 검사기관 평가 강화, 제작결함조사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음

* 속도제한, 영상장치, 정격하중 경고·확인, 이상경고장치 등

○ 특히,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 합동점검*을 실시(20.1~3)하여 불법 장비 및 부실 검사기관을 현장에서 전면 퇴출해나가겠음

* (대상) 소형 1,247대, (참여) 국토부, 고용부, 시설안전공단,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

☐ (이륜차 사고) 최근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,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데?

☐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

* 이륜차로 인한 사망 : ('16) 614명 → ('17) 564명 → ('18년) 537명

○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,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는 등 이륜차 단속 강화 및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,

○ 경찰청·고용부 등 관계기관 및 배달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여, 사업자의 안전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

☐ (MaaS)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통합교통서비스(MaaS)를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?

☐ MaaS 도입을 위해서는 교통 거점지역(공항, 철도역 등)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, 민간사업자의 참여유도, 제도개선 및 플랫폼 기술개발이 선행될 필요

○ 공항 및 철도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및 렌터카, 카셰어링 등 공유차량과 동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

○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해 공공이 주도한 지역 특색에 맞는 시범사업*을 우선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

*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도심형 MaaS, 관광거점도시와 연계한 관광형 MaaS구축

☐ (자율주행차)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?

☐ 현재 자율주행차로는 유상 여객·화물 서비스의 제공이 안됐으나,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「여객자동차법」, 「화물자동차법」 등의 규제 특례를 받아 시범운행이 가능해지며,

○ 무인로봇, 원격운행자율차 등 기존제도 적용이 어려웠던 신기술* 실증이 허용됨

* 무인셔틀, 무인배송로봇,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, 원격운행자율차 등

○ 이를 통해 현실 여건을 반영한 자율주행 유상 운송의 사업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,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

☐ (S-BRT)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S-BRT 도입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상황은?

☐ S-BRT 사업추진을 위해 S-BRT 표준가이드 라인을 마련('20.1)했으며, S-BRT 5개 시범사업*을 선정('20.1)하여 추진 중임

* 인천계양~부천대장, 창원BRT, 인천 인하대~서인천, 성남BRT, 세종BRT

☐ 아울러, '20.1월 「S-BRT 시범사업 추진 지원 TF」를 구성하였으며, 사업 초기부터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한 추진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

☐ (BTX) BTX의 개념과 추진일정은?

☐ BTX는 친환경 대용량 교통수단*을 활용하고 고속형 전용차로를 운행하여 통행시간을 30%가량 대폭 단축한 지상의 GTX 서비스

* 전기버스, 2층버스, 굴절버스 등

○ 고속 전용차로(전용도로, 지하차도 등)를 이용하고, 서울시 외곽의 타 교통수단과 환승거점을 설치하여 도심 거점간 신속한 이동성 확보

☐ 수도권 동·서부 지역의 광역버스 기반 교통체계 개선 연구*를 통해, 연내 사업 추진계획(안)을 구체화하고 우선 시범사업 구간에 대한 예산 확보 추진

* (서부권) 광역버스 급행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(19.12.~20. 9. 영남대)
(동부권)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버스 기반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
(19.11.~20. 8. KOTI)

☐ (준공영제)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향후 추진 계획은?

☐ 연구용역*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및 경기도·인천시 등 지자체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도입방안 확정,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착수

*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마련 연구('19.7~'20.7, 한국교통연구원·경기연구원)

○ 과다한 재정 투입,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회계감사, 체계적인 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 등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도입방안을 마련

○ 하반기부터 광역버스 서비스 사각·소외지역 등을 중심으로 9개 노선에 대하여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

* 준공영제 노선 예상손실의 30%를 국가에서 보조('20년 예산 13.5억원)

☐ (인바운드 시범공항) 시범공항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지?

☐ 3개 시범공항은, 운수권 배분 시 방한 수요가 큰 중국 등 주요 노선 집중배분 등을 통해 운항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

○ 항공사·여행사에 대한 마케팅비 등 인센티브*를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유도할 예정

* 전세기 지원금 확대(편당 300만→500만원), 여객상품 개발지원(1억원), 노선별 해외광고 지원(최대 5천만원) 및 기타 해외 온라인 여행사 광고 등

☐ (안전한 생활환경) 상주~영천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안전 강화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?

☐ 터널·교량 특별 관리 강화, 재난·재해 대응 효율화, 과속·과적 등 고위험차량 휴게공간 확충 등 도로 인프라 측면의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

○ 과학적 사고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, 사고원인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인프라·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로안전 추진체계를 혁신하겠음

☐ 도로살얼음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달에 발표한 「겨울철 도로교통안전 강화대책(1.7)」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

* 취약관리구간 확대(193→403개소), 자동 염수분사시설, 노면 흙파기 등 인프라 확충 등

☐ (서부권 등 급행철도) 철도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인 서부권 등 급행철도의 진행 상황은?

☐ 서부권 등 급행철도에 대해 광역교통시행계획('21~'25) 등 상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,

○ 수도권 서부권 등 급행철도 노선이 계획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노선을 검토할 것임

☐ (환승센터) 청량리역 및 서울역 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강북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가?

☐ GTX 교차점인 청량리역(B·C)과 서울역(A·B)에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여, 철도 및 버스 등이 집결하는 대중교통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임

○ 아울러, 역세권에 공공주택 및 상업·문화시설을 도입하여 강북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

*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(5.5억원, '20.3~'21.2)

**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(4.5억원, '20.2~'21.7)

참고 4

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.			
▪ 혁신도시	혁신도시정책총괄과	이대섭 과장 최승욱 서기관	044-201-4456 4458
▪ 노후산단 재생	산업입지정책과	김근오 과장 김성환 서기관	044-201-3674 3677
▪ 기업혁신특구	산업입지정책과	김근오 과장 김성환 서기관	044-201-3674 3677
▪ 인바운드 시범공항	국제항공과	신윤근 과장 이호준 사무관	044-201-4207 4211
▪ 공항주변 개발	공항정책과	방현하 과장 박선용 사무관	044-201-4328 4333
▪ 새만금	복합도시정책과	강태석 과장 김은정 서기관	044-201-3684 3689
▪ JDC	복합도시정책과	강태석 과장 이채훈 사무관	044-201-3684 3687
▪ 행복도시	복합도시정책과	강태석 과장 김봉길 사무관	044-201-3684 3686
▪ 재정 조기집행	재정담당관	이정희 과장 최 찬 사무관	044-201-3238 3239
▪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	도로정책과	이상헌 과장 김 호 사무관	044-201-3875 3881
	철도건설과	임종일 과장 천홍식 사무관	044-201-3950 3953
▪ 지역 공항 운영 및 인프라 구축	공항정책과	방현하 과장 심동휘 사무관	044-201-4328 4337
▪ 용산공원	공원정책과	신보미 과장 김민정 사무관	02-2131-2030 2036
▪ 미집행 도시계획시설	녹색도시과	성호철 과장 김의연 사무관	044-201-3742 3749
▪ 개발제한구역	녹색도시과	성호철 과장 김정민 주무관	044-201-3742 3748
▪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	건축문화경관과	김태경 과장 방대혁 사무관	044-201-3775 3778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▪ 한옥 건축	건축문화경관과	김태경 과장 정문희 사무관	044-201-3775 3779
▪ 경관 관리	건축문화경관과	김태경 과장 정문희 사무관	044-201-3775 3779
▪ 성장관리방안	도시정책과	이상주 과장 오원택 사무관	044-201-3706 3709
▪ 남북 인프라 협력	국토정책과	정의경 과장 문수빈 사무관	044-201-3646 3651
▪ 국제철도	철도정책과	김헌정 과장 서혜린 사무관	044-201-3938 4643
▪ 국제도로	도로정책과	이상헌 과장 신우철 사무관	044-201-3875 3874

2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.

▪ 자율주행차	첨단자동차기술과	이창기 과장 정재원 사무관	044-201-3847 3848
▪ 드론	첨단항공과	문석준 과장 홍일산 사무관	044-201-4307 4253
▪ 스마트 시티	도시경제과	배성호 과장 정승수 사무관	044-201-4845 4097
▪ 스마트 시티 해외진출	도시정책과	이상주 과장 최희정 사무관	044-201-3706 4972
▪ 스마트 건설	기술정책과	장순재 과장 하철호 사무관	044-201-3549 3557
▪ 수소 경제	도시활력지원과	김남균 과장 송규상 사무관	044-201-3730 3733
	도로정책과	이상헌 과장 신우철 사무관	044-201-3875 3874
▪ 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	국토정보정책과	한동민 과장 이선영 사무관	044-201-3458 3465
▪ 제로에너지건축(ZEB)	녹색건축과	김유진 과장 김용수 사무관	044-201-3768 3769
▪ 국토교통 벤처·중소기업 집중 지원	미래전략사업지원과	김태형 과장 김종오 서기관	044-201-3258 4095
▪ 국토교통 규제혁신	규제개혁법무담당관	윤종수 과장 한동균 서기관	044-201-3224 3235
▪ 일자리 창출	미래전략사업지원과	김태형 과장 김종오 서기관	044-201-3258 4095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▪ 건설업 공정성 강화	건설정책과	주종완 과장 이기림 사무관	044-201-3504 4597
▪ 택시	도시교통과	오송천 팀장 김동규 사무관	044-201-4770 4757
▪ 노선버스 주 52시간	대중교통과	김동준 과장 양찬윤 사무관	044-201-3823 3832
▪ 화물차 안전운임제	물류산업과	김완국 과장 이양구 사무관	044-201-4016 4018
▪ 택배종사자 보호	물류정책과	이성훈 과장 서정관 서기관	044-201-3993 3994
▪ 공항 지상조업 근로환경 개선	공항안전환경과	조현준 과장 이호락 사무관	044-201-4347 4344
▪ 철도 부품산업 육성	철도운행안전과	송시화 과장 이건준 사무관	044-201-4611 4620
▪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	자동차운영보험과	윤진환 과장 김영건 사무관	044-201-3835 3840
▪ 물류단지	물류시설정보과	박일하 과장 김선욱 사무관	044-201-4006 4007
▪ 항공산업 활성화	첨단항공과	문석준 과장 김남극 사무관	044-201-4307 4225
▪ 100대 혁신뿌리기업	건설정책과	주종완 과장 전인재 서기관	044-201-3504 3497
▪ 건설구조 개편	건설정책과	주종완 과장 전인재 서기관	044-201-3504 3497
▪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	토지정책과	남영우 과장 문영훈 사무관	044-201-3398 3399
▪ 리츠시장 육성	부동산산업과	유혜령 과장 김중한 사무관	044-201-3411 3414
▪ 중개서비스 활성화	부동산산업과	유혜령 과장 김영숙 사무관	044-201-3411 3412
▪ 공정한 감정평가 환경 조성	부동산평가과	신광호 과장 조성태 서기관	044-201-3422 3423
▪ 투자개발사업 활성화	해외건설정책과	박재순 과장 문봉섭 사무관	044-201-3516 3521
▪ 신남방	해외건설지원과	김기용 과장 이윤하 사무관	044-201-3526 3528
▪ 신북방	해외건설지원과	김기용 과장 이주동 사무관	044-201-3526 3293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③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.			
▪ 공적주택 21만호	주거복지정책과	김석기 과장 좌명한 사무관	044-201-4504 4506
▪ 문화예술인 행복주택	공공주택총괄과	이병훈 과장 김선영 사무관	044-201-4539 4517
▪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	공공주택총괄과	이병훈 과장 김병채 사무관	044-201-4539 4514
▪ 쪽방촌 정비	공공택지기획과	김승범 과장 강한우 사무관	044-201-4505 4515
▪ 반지하 가구 지원	주거복지정책과	김석기 과장 박승연 사무관	044-201-4504 4740
▪ 노후아파트 재생	도시재생정책과	정우진 과장 박현근 사무관	044-201-4903 4907
▪ 노후 영구 임대주택 주거재생	공공주택총괄과	이병훈 과장 김갑중 사무관	044-201-4539 4513
▪ 최저소득계층 패키지 지원	주거복지정책과	김석기 과장 박승연 사무관	044-201-4504 4740
▪ 공동주택의 성능 향상	주택건설공급과	이유리 과장 최민중 사무관	044-201-3364 3336
▪ 공동주택 하자 저감	주택건설공급과	이유리 과장 민경철 사무관	044-201-3364 4897
▪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조기화	공공택지기획과	김승범 과장 김영지 사무관	044-201-4505 4441
▪ 공공주택 1만호 조기 착공	공공택지관리과	임월시 과장 박장근 사무관	044-201-4522 4524
▪ 미매각 용지 용도변경	부동산개발정책과	오성익 과장 권지현 사무관	044-201-3434 3438
▪ 가로주택정비사업	주거재생과	이소영 과장 김태웅 사무관	044-201-4937 4941
▪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	주거복지정책과	김석기 과장 좌명한 사무관	044-201-4504 4506
▪ 신혼특화단지	공공주택총괄과	이병훈 과장 김선영 사무관	044-201-4539 4517
▪ 신혼희망타운	공공주택총괄과	이병훈 과장 이민규 사무관	044-201-4539 4580
▪ 다자녀가구 지원	공공주택지원과	최아름 과장 박선영 사무관	044-201-4530 4531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▪ 고령자 복지주택	공공주택총괄과	이병훈 과장 김갑중 사무관	044-201-4539 4513
▪ 스마트홈 서비스	주택건설공급과	이유리 과장 최혜리 사무관	044-201-3364 3365
▪ 빈집	주거재생과	이소영 과장 김태웅 사무관	044-201-4937 4941
▪ 빈집 밀집지역	주거재생과	이소영 과장 김태웅 사무관	044-201-4937 4941
▪ 소규모 주택정비	주거재생과	이소영 과장 김태웅 사무관	044-201-4937 4941
▪ 방치된 건축물 정비	건축정책과	김성호 과장 정재형 사무관	044-201-3755 4754
▪ 부동산시장 관리체계 강화	주택정책과	이명섭 과장 전성환 사무관	044-201-3317 3314
▪ 공시가격	부동산평가과	신광호 과장 조성태 서기관	044-201-3422 3423
▪ 청약제도 개선	주택기금과	황윤언 과장 김진호 사무관	044-201-3337 3351
▪ 분양가 산정기준	주택정책과	이명섭 과장 유용일 사무관	044-201-3317 4089
▪ 임대차 신고제	주택정책과	이명섭 과장 유지만 사무관	044-201-3317 3321
▪ 전세금 반환보증	주택기금과	황윤언 과장 김지혜 사무관	044-201-3337 3338
▪ 정비사업, 주택조합 공공성 강화	주택정비과	이재평 과장 김종성 서기관	044-201-3383 3384

④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여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.

▪ GTX	수도권 광역급행철도팀	장창석 팀장 박정란 사무관	044-201-3964 3983
▪ 신안산선	철도투자개발과	나진항 과장 백승록 서기관	044-201-3988 3982
▪ EMU-250	철도운영과	이창희 과장 김성진 사무관	044-201-3970 4631
▪ 400km/h 초고속열차	철도건설과	임종일 과장 이상욱 사무관	044-201-3950 3961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▪ 간선 도로망 기능 강화	도로정책과	이상헌 과장 김 호 사무관	044-201-3875 3881
▪ 대심도 지하고속도로	도로정책과	이상헌 과장 김 호 사무관	044-201-3875 3881
▪ 환승센터	광역환승시설과	이우제 과장 장상준 사무관	044-201-5100 5134
▪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	광역환승시설과	이우제 과장 김성수 사무관	044-201-5100 5132
▪ 개인용 이동수단 전용도로	간선도로과	이정기 과장 김강문 사무관	044-201-3888 3907
▪ M버스	광역버스과	박문수 과장 박선동 사무관	044-201-5065 5069
▪ S-BRT	간선급행버스체계과	남동경 과장 정정균 사무관	044-201-5115 5117
▪ BTX	간선급행버스체계과	남동경 과장 김철환 사무관	044-201-5115 5124
▪ 편리한 서비스 : 철도	철도운영과	이창희 과장 류상훈 사무관	044-201-3970 4632
▪ 편리한 서비스 : 도로	간선도로과	이정기 과장 김강문 사무관	044-201-3888 3907
▪ 편리한 서비스 : 공항	항공정책과	김기대 과장 정재웅 사무관	044-201-4204 4189
▪ 신도시 교통불편 완화	광역교통정책과	손덕환 과장 김인규 사무관	044-201-5045 5056
▪ 광역버스 준공영제	광역버스과	박문수 과장 박선동 사무관	044-201-5065 5069
▪ 교통약자 배려	교통안전복지과	윤영중 과장 배성희 사무관	044-201-3862 3870
▪ 광역알뜰교통카드	광역교통요금과	장구중 과장 유찬호 사무관	044-201-5080 5082
▪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	도로투자지원과	박병석 과장 김병철 사무관	044-201-3897 3906
▪ 도심 내 항공운송 패러다임 확장	미래드론교통담당관	이랑 과장 서정석 사무관	044-201-4197 4198
▪ 플랫폼 택시 확산	도시교통과	오송천 팀장 박효철 서기관	044-201-4770 4756
▪ 한국형 MaaS 활성화	신교통서비스과	박준상 과장 최규용 사무관	044-201-3817 3820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[5]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			
▪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	교통안전복지과	윤영중 과장 이정식 사무관	044-201-3862 3863
	간선도로과	이정기 과장 김강문 사무관	044-201-3888 3907
▪ 화물차 사고예방	물류정책과	이성훈 과장 이충수 사무관	044-201-3993 3997
▪ 이륜차 사고예방	교통안전복지과	윤영중 과장 이정식 사무관	044-201-3862 3863
▪ 안전한 도로환경	도로정책과	이상헌 과장 신우철 사무관	044-201-3875 3874
▪ 항공 안전	항공안전정책과	김상수 과장 박주환 사무관	044-201-4244 4245
▪ 철도 안전	철도안전정책과	김 인 과장 신영우 사무관	044-201-4600 4602
▪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감축	건설안전과	한명희 과장 장은석 사무관	044-201-3573 3574
▪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	건설산업과	박문신 사무관 임종채 사무관	044-201-4588 3542
▪ 불량자재 퇴출	건설안전과	한명희 과장 박성호 사무관	044-201-3573 3579
▪ 노후SOC	기술정책과	장순재 과장 성언수 사무관	044-201-3549 4997
▪ 지하공간	건설안전과	한명희 과장 현기창 사무관	044-201-3573 3584
▪ 건축물 안전관리	건축안전과	홍성준 과장 박영주 사무관	044-201-4987 4988
▪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	도시경제과	배성호 과장 박정현 사무관	044-201-4845 3713
▪ 미세먼지 저감	도로운영과	오수영 과장 남궁부 사무관	044-201-3909 3915
▪ 방역	도로정책과	이상헌 과장 신우철 사무관	044-201-3875 3874